



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

- ◆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「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」 논의
- ◆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, 비대면·온라인 방식의 예술 창작·유통·향유 지원방안 발표
- ◆ 교육·연구 및 교정업무 분야의 공정성 향상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「청탁금지법」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9월 9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제1호 안건으로 「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」을 논의한다.

-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고,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‘공유·협력·연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’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첫째, 대학 간 협업·공유를 통한 혁신을 지원한다.
 -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,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내대학 석사학위과정과 국내-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·석사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.



- 올해부터 추진하는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’을 통해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.
 - ※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추진(2020년 하반기~)
- 이를 위해 ‘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’를 도입하여 대학 간 공유·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, 대학 간 교육과정·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 반영*해나갈 예정이다.
 - *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(2021년) → 차기 진단 모델 마련(~2022년)
- 둘째, 급증하는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인재를 양성한다.
 - ‘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’(2021년~, 신규)을 통해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,
 - 대학별로 특화된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결집하여,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·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.
 - 특히, 비전공자 학생들도 희망하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한다.
- 셋째,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,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.
 - 대학은 ‘원격교육지원센터’를 설치하여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,

○ 교직원·전문가·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'원격수업관리위원회'를 통해 학기 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, 강의준비·운영부터 환류까지 상시 질 관리 체제를 구축·운영한다.

○ 정부는 이러한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, **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지원**,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**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재정지원**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.

※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,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 실시,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배치(2020년 하반기 4,200명, 총 412억 원)하여 콘텐츠 제작 운영 지원

□ 넷째, **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**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한다.

○ 취업준비생들이 **신기술 분야 교육과정**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**우수 프로그램을 발굴·지원**하고,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**채용조건형 계약학과**를 신설한다.

○ 코로나19 상황에도 **현장실습과목 이수**가 가능하도록 증강현실(AR)·가상현실(VR) 기술을 활용한 **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**하고, 관련 규정*도 개정하여 탄력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.

*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(2020년 하반기)

제2호 안건으로 「**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**」을 논의한다.

□ 이번 방안은 우리의 삶에 위안이 되는 예술이 **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**을 위한 것이다.

○ 그동안 정부는 긴급지원(2.20., 3.18.) 및 3차 추경(7.3.) 등을 통해,

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**자유활동(프리랜서) 예술인과 공연 업계에 생계지원 및 일자리 지원**을 추진해왔다.

※ 예술인 창작준비금(1인 300만 원) 지원(15,260명, 458억 원), 생활안정자금 용자(71억 원, 1,090명), 공연예술 현장인력 일자리 지원(3,500명),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자리(8,500명) 등

○ 그러나,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화시설 휴관·재개관이 반복되면서 예술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,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'**비대면 예술**'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.

①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여 새로운 예술 성장을 유도한다.

○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'**온라인·미디어**' 활용 예술 창작을 위해 올해 전국 17개 시도 2,700여 명 예술인의 온라인 환경 초기 적응과 활동을 지원하고, 온라인 환경의 성공이 내년에는 대면 예술활동으로도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.

○ 4차 산업 핵심기술(빅데이터·5G·AI 등)과 예술적 상상력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'**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**'도 확대한다.

- 아이디어 기획, 구현기술 개발, 창·제작, 발표 등 단계별로 기술 활용 공연·전시 제작 지원을 체계화하고,

- 민간 수요를 반영한 '**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**'(R&D)도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.

② 언제 어디서나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을 구축한다.

○ 국립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가 온라인 공연 모델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,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한다.

- ▲실감형 기술결합 공연 제작(예술의 전당), ▲고화질 공연 영상 판로개척(국립극장), ▲다중시점 등 차별화된 관람경험을 제공하는

온라인 극장 도입(국립극단) 등 예술 접근 방법을 다각화한다.

- 아울러, 고품질 공연영상, 온라인 공연 생중계 지원을 확대하며, '예술의전당'에는 민간단체 공연 영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'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'를 조성한다.
- 이밖에도, 장애 유형별 맞춤형 공간 설계를 통한 무장애(barrier free) 문화예술 공간인 '장애예술 공연장'도 신규로 조성한다.
- 한편, 공연·문학·미술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·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해외 진출도 활성화한다.
- '공연 수출 온라인 플랫폼', '한국문학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 플랫폼' 등 비대면 거래 기반을 강화하고, '현대미술 한류 프로젝트'를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온라인 전시관에서 홍보한다.

③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인다.

- 공연작품 및 미술작품 디지털화, 예술자료 디지털화 등 비대면 청년 일자리(1,650명), 장애예술인 일자리(120명)를 지원하고, 예술 분야 취업 지원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.
- 혁신적인 예술 서비스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예술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(창업-초기-성장기) 지원을 확대(2020년 62개→2021년 92개)하고, 분야별 종사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(2021년 35개 과정)할 계획이다.

④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로 예술 성장의 토양을 마련한다.

- 온라인·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을 위해, 음악, 미술, 무용 등 예술교과 연계 교육콘텐츠와 인성, 진로, 인권 등 범교과 학습주제 연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, 온라인 콘텐츠 감상교육, 예술체험 꾸러미 활용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한다.

- 고립감 등 코로나 우울로 인해 국민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, 대국민 대상 예술치유 꾸러미를 제공(5,000여 명)하고 의료진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(120명)도 지원한다.
- 국립문화시설의 온라인·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*하고,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(2021년 90개소), 스마트 박물관·미술관 조성(2021년 80개소) 등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경험 기반을 마련한다.

* 박물관·미술관의 온라인 전시·해설 및 소장품 온라인 공개 강화, 공공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, 시·청각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·확대 등

- 또한,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규모를 확대(2020년 161만 명, 9만 원 →2021년 177만 명, 10만 원)하고, 비대면 자동 재충전 기능*을 도입(2021년 1월)하여, 더욱 편리한 문화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.

* (현행)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 신청 → (개선) 최초 발급 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지급

□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,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예술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.

- 정부는 비대면 예술 성장이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체 예술시장의 성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, 현장과 소통하며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·조정해 나갈 계획이다.

제3호 안건으로 「청탁금지법 개정 추진」을 논의한다.

-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.
- 우선, 전습생·장학생 선발, 학위수여, 교도관의 교정·교화 업무 등

현행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,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한다.

※ (견습생·장학생 선발, 학위수여 등) 부정청탁으로 제재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업무

(교도관의 교정·교화 업무) 법원 판결(대전고등법원 2017노412)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

- 이와 함께,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▲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과 ▲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□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전현희)를 중심으로 「청탁금지법」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
- 공공기관, 법조계, 학계 등 대표자 4인의 ‘전문가 토론회’를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(권익비전 ▶ www.youtube.com/user/acrc0229)를 통해 생중계(9월 11일(금) 오전 11시)하고,
- ‘권익비전’ 및 ‘국민생각함’의 ‘온라인 의견 등록’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청취(9월 11일(금)~20일(일)) 한다.

